

[9월 7일 정치에 있어서의 기독교적인 것의 의미 토론회 발제원고]

## 기독교 정치의 가능성과 독특성

(민종기, 충현선교교회 담임목사, 폴러신학교 겸임교수)

### 서언

우리는 약 120년 개신교의 역사 속에서 많은 개신교 지식인과 정치인 그리고 민족지도자를 가져본 경험이 있다. 제국주의 서구열강의 침략과 함께 기독교가 들어온 것이 아니라 이나라는 오히려 일본의 억압 속에서 민족의 고난에 함께하는 개신교를 받아들였기에 오랜 동안 개신교는 민족의 지도자를 지속적으로 배출하였다. 그러나 많은 개신교 지도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감리교 출신의 이승만 대통령, 장로교 장로 출신의 김영삼 대통령의 기억은 그리 유쾌하지 못하다. “민족의 모세,” “위대한 국부(國父)”로 불리어졌던 이대통령은 결국 독재와 망명으로 끝을 맺었고, 많은 혁파와 개혁에도 불구하고 김대통령의 정치적 말년은 비상하게 거듭된 인재와 국제구제금융(IMF)의 오명으로 마무리를 했다.

이제 우리는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의 신승에 이어 다시 장로대통령의 등장을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이즈음에 교회와 기독교 시민단체는 과연 어떠한 입장에서 기독교 정치인의 등장을 바라보며 분석하고, 어떠한 입장에서 신자인 대통령을 위하여 지원하면서 기도하여야 할 것인지 생각하여야 한다. 그 이유는 개신교 장로인 대통령의 지도력은 교회의 위상과 이미지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신자인 대통령을 통하여 기독교 집단의 분파적 이기주의의 추구는 곧 질타의 대상이 될 것이다. 아울러 “서울을 하나님께 봉헌한다”는 시장시절의 선언으로 이 후보가 비판의 대상이 되었던 것을 기억한다면, 이제 대통령이 되어서 순수한 신앙적 선언이나 언명은 오히려 반기독교적인 저항을 불러일으켜 이 후보의 입지를 좁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기독시민과 교회 및 기독교 단체는 이명박 후보, 또한 장로 대통령의 가능성을 바라보면서 배타적 행동을 하므로 타종교나 무신론자들의 반기독교적 연대를 강화시키는 실수를 범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다. 당선가능성이 가장 높은 이 후보는 이제 교계의 지도자가 아니라 국민적 지지를 받는 정치인이다. 신자와 불신자를 아우르고, 교회와 국가를 승승의 차원에서 창조적으로 이끌어가는 새로운 정권의 탄생을 위하여 노력하는 것과 도움을 주고 받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이다.

### 기독교와 정치

가장 고전적인 문화신학자의 한 사람인 리챠드 니버(Richard Niebuhr)가 “그리스도와 문화”에서 보여주었던 5가지의 성찰은 그리스도와 정치를 분석하는 틀로도 사용될 수 있다. 니이버에 의하면 그리스도와 문화의 다섯 가지 관계 유형이 있다. 그 첫째는 문화에 대립하는 그리스도, 둘째는 문화의 그리스도, 셋째는 문화 위의 그리스도, 넷째는 문화와 역설적인 관계 속의 그리스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화 개혁적인 그리스도이다. 정치를 문화의 한 하부문화의 영역으로 이해한다면, 이 다섯 가지 관계유형은 그 순서에 따라 정치에 대립하는

그리스도, 정치의 그리스도, 정치 위의 그리스도, 정치와 역설적인 관계 속의 그리스도, 그리고 정치개혁적인 그리스도로 바꿀 수 있다.

여기서 “정치에 대립하는 그리스도”라 함은 그리스도는 정치와 아무 상관이 없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역은 오로지 교회이며, 정치와 종교, 국가와 기독교 신앙은 관련성이 없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는 기독교 정치, 기독교 국가, 기독교 정치인은 그 관련성이 의심스러우며 가능하지도 않다고 본다.

그러나 “정치의 그리스도”라는 관점은 정치와 그리스도 사이에 전혀 갈등은 없으며 교회와 정치의 갈등은 교회의 무지의 소산이라는 것이다. 인간의 가장 고상한 제도, 철학, 정치적 이상은 그리스도와 일치되는 것이며, 따라서 기독교 정치, 기독교 국가 및 기독교 정치인은 마땅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나머지 세 입장은 정치와 그리스도가 일정한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약간의 유보와 관계설정의 특징이 존재하는 것은 부정할 수 없지만, 기본적으로 정치와 그리스도는 관계가 있고, 기독교 정치와 기독교 정치인은 어느 정도 가능하다. 다만 “정치 위의 그리스도”는 영적인 위계질서에서 사제의 영적 위계 아래 존재하는 정치를 말하는 반면, “정치와 역설적인 관계의 그리스도”라는 입장은 정치의 영역이 선과 악의 역설적인 측면을 가지므로 기독교 정치의 오직 제한된 부분만을 인정하고 협조하는 정치적 보수주의의 입장을 낼는다.<sup>1)</sup>

마지막 입장인 “정치변혁적인 그리스도”라는 관점에서 보면, 기독교 정치나 기독교 정치인은 가능할 뿐만이 아니라 필요하다. 그리스도는 정치의 개혁과 변혁을 추구하므로, 성도의 정치적 책임은 필요할 뿐 아니라 정치적 소명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주권과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기독교 정치인과 기독교 정치는 다른 소명에 의하여 이끌리는 문화적 영역의 지도자들처럼 필요하고 중요하며 그리스도의 통치를 드러내는 사역자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치에 “기독교”라는 술어를 붙이는 것이 대체적으로 가능하다. “정치에 대립하는 그리스도”라는 선택 외에는 다른 모든 입장이 기독교 정치와 기독 정치인을 용납하고 철학적으로 정치신학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렇다면 현재에도 이러한 고전적 분석이 얼마나 설득력 있게 응용되고 있을까?

## 기독교 정치와 미국의 기독교 집단

그리스도와 문화의 관계가 교회의 전통에 따라 다르듯이, 기독교와 정치의 관련성에 관한 다양한 선택은 교회내의 다양한 파벌에 따라 다르다. 제임스 스킬렌(James Skillen)이 자신의 저서 흩어진 목소리(Scattered Voice)에서 통찰력을 제공한 것처럼, 미국에서의 기독교 각 유파의 정치적 선택은 많은 편차를 보인다.

먼저 기독교정치라는 말을 비교적 수월하게 붙이는 사람들은 미국에서 보수-우파적 성향을 가진 교회 지도자와 성도들이다. 이들에게 기독교정치인은 당연한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지상에서 구현하는 도구이다. 레이건 이후의 공화당과 밀접한 연관성을 맺고 있는 신

1) 교회와 국가, 정치와 종교의 역설적인 관계는 분리의 입장은 아니지만 정치에 대한 교회의 소극적 참여만을 인정한다. 이러한 입장은 독일의 루터파에 의하여 대표되는 입장이다. 독일 고백교회를 제외한 대부분의 루터파교회는 이같은 입장 속에서 히틀러 정부에 대한 소극적 반대와 묵동의 태도를 보였으며, 적극적으로 정치개혁의 행보를 택하지 못하므로 심각한 2차 대전의 범죄적 결과와 교회의 무책임을 드러내었다.

종교우파(NRR, New Religious Right) 혹은 신기독교우파(NCR, New Christian Right)는 미국을 “기독교 국가”의 전통 속에서 보며, 그들에 의하면 미국의 시민종교는 기독교이다. 이들은 미국의 청교도적 전통과 청교도적 토대를 강조하며, 미국은 하나님께 드려진 나라이므로 당연히 기독교적 전통위에 선 지도자가 다스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리 휠웰, 랠프 리드 및 팻 로버슨 등의 대중적 기독교 지도자는 이와 같은 경향 속에서 강력한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하여 왔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과 대척점에 있는 패러다임으로 볼 때, 기독교와 정치는 상관이 없으며, 국가가 기독교국가가 되는 것은 신정시대를 지난 지금에 있어서 더욱 시대착오적이라는 것이다. 메노나이트 계통의 신학자들의 경향 속에서 대표적인 신학자로서 작고한 “예수의 정치(*The Politics of Jesus*)”의 저자 John Howard Yoder나 활발한 활동 중에 있는 1) Stanley Hauerwas와 Gregory A. Boyd<sup>2)</sup>는 이러한 입장을 견지한다. 이들에게는 국가와 교회, 정치와 종교는 분명하게 대조적이므로 정치지도자를 기독교적이라고 부르는 것은 옳지도 않으며, 결국 교회를 오염시키는 결과를 낳는다고 본다.

앞의 두 가지 입장과는 차이를 이루면서 기독교인의 정치참여를 위한 중요한 이론적 틀을 제공하는 제시하는 패러다임을 가진 사람들이 원리적 다원주의(principled pluralism)라는 전통에 서서 이론작업을 하는 신칼빈주의(Neo-Calvinism) 학자군이다. 이들에게 있어서 정치와 종교는 각기 다른 영역으로 분리되어 있다. 그러나 정치 영역이 사단과 흑암의 권세에게 내어준 영역은 아니며, 이 역시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이다. 그러므로 기독교인은 이 영역에 참여할 뿐만이 아니라 참여하여 개혁을 이뤄야한다는 당위성을 제시받는다. 이러한 스펙트럼은 우리의 정치적 현실을 조망하는 기독교인들에게도 적용한 이론적 틀을 제공할 수 있다. 메노나이트적 신학의 경향을 가진 보수적 교파를 제외한다면, 대부분 한국 기독교의 각 교파간의 입장은 대체로 기독교 정치에 대하여 이론적으로 큰 거부를 가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기독교 정치의 가능성을 논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독특성은 무엇일까?

## 기독교 정치인의 정체성

### 1. 정치철학.

정치적 문제는 정치인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정치인의 문제는 그가 가진 정치철학의 문제로부터 시작된다. 정치인이 정치적 상황을 진단하는 방식과 그 처방의 방법은 그의 철학으로부터 비롯된다. 따라서 정치인이 가지는 정치철학은 상황에 대한 위기의식으로부터 시작하여 현실을 분석하고 장래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며 상황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종합적인 이론의 틀이다. 대체적으로 정치인의 철학적 기조는 “자유주의적(liberal),” “보수적(conservative),” “혁신적(radical),” 그리고 “반동적(reactionary)”인 성향으로 구분된다. 이중에서 자유주의적이거나 혁신적인 성향의 정치철학은 개혁에 대해 낙관적이며, 보수적이고 반동적인 정치성향은 개혁에 대해 비관적이다. 아울러 자유주의자나 보수주의자는 현제도에 대해 만족하며 현상유지를 주장하나, 혁신주의자 및 반동세력은 현상타파를 의도한다.

2) 그의 다양한 저서 중에서 이 분야에 대한 번역서는 십자가와 칼: 위에 서는 힘, 아래에서 섬기는 힘이다. *The Myth of Christian Nation*. 신선해 역. 서울: 한언, 2007.

그러나 이러한 여러 정치적 유명 브랜드 중 어느 것도 그리스도인의 정치적 입장을 완전하게 대변하는 것은 없다.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에 여러 다양한 교파가 함께 하듯이, 그리스도인들은 공통된 정치적 견해를 가지고 있지 못하며, 성경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정치적 입장의 공유는 거북하거나 불가능한 일로 여겨져 왔다. 따라서 “기독교 정치인”이라는 말은 기독교적 정치철학을 가지고 기독교적 프로그램이나 대안을 제시하는 정치가를 말하기보다는, 신자로서 정치에 참여하는 정객이나 정치인을 의미하는 말로 변질되었다.<sup>3)</sup>

## 2. 적실성 있는 정치행위를 위한 권력장치(polynomial apparatus)

정치인은 정치행위를 직업으로 삼은 정치행위자를 의미한다. 여기서 정치행위란 주로 국가의 중대사에 대한 정책결정을 하며 국가를 경영해 나아가는 데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일이다. 근대 이전의 사회에서 정치는 소수의 사람에 의해 점유되어 있었다. 그러나 국가 경영의 규모가 확대되며 최고위의 정책결정자는 정치적 지혜자의 카운슬링을 통하여 국가 내부의 갈등을 조정하려 하였다. 최초의 정치에 대한 카운슬러들은 경전을 읽기 위하여 가장 먼저 문맹을 퇴치한 종교인 계급에서 나왔다. 그 이후 지식과 언어를 습득한 학자와 현실정치에 민감한 궁정귀족이 차례로 정치, 외교를 관장하였다. 근대 이후 정치영역에 이익의 갈등이 점증되면서 전문적 법 지식을 가진 사람은 어떠한 관리보다도 강력한 논리를 제공할 수 있는 카운슬러가 되었다. 여기서 권력을 장악한 사람과 그 주위에 있는 정치적 카운슬러, 그리고 권력의 장치를 운영해 가는 조력자들은 직업정치인의 범주에 넣을 수 있다.

### 정치적 관심층(the political strata)

권세자(the powerful): 권력 장치(polynomial apparatus)의 보유

권력추구자(the power-seekers)

권력에 대한 관심을 가진 자

### 무관심층(the apolitical strata)

그러나 정치에 대한 식견과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정치 일선에서 활동하지 않는 많은 지식인과 시민들이 있다. 로버트 다알(Robert Dahl) 교수는 권력의 정상으로부터 평범한 시민에 이르기까지의 정치참여 계층을 구분하고 있다. 그는 먼저 시민을 정치적 관심층(the political strata)과 무관심층(the apolitical strata)으로 나눈다. 정치적 관심층은 다시 첫째, 일반적으로 권력에 대한 관심을 가진 자와 둘째, 그들 중에서도 특별히 권력을 추구하고 있는 자인 권력추구자(the power-seekers)와 셋째, 이미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권세자(the powerful)로 나누어진다.<sup>4)</sup>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대통령으로서의 기독교 정치인이라 함은 권세자의 범주에 든다, 권세자는 권력의 장치를 가져야하는데, 그 권력 장치는 정당, 이념적 동질성을 가진 시민단

3) 14대 이후 국회의원의 약 40-50%에 이르는 비율이, 심지어 어떤 통계에서는 60%에 이르는 정치인이 “기독교 정치인”이라는 통계를 보여 주었으나 “기독교”라는 형용사의 의미심장한 차별성은 실제 정치상황에서 별로 보이지 않는 듯하다. 기독정치인의 정체성은 보수-혁신 구도 및 지역주의(regionalism)라는 변수에 의해 늘 퇴색되고 있다.

4) Robert Dahl, Modern Political Analysis(Englewood Cliffs: Prentice-Hall, Inc., 1970), 56-71. 이국찬 『정치학』, 324-5에서 재인용.

체, 행정부, 경찰 및 군대이다. 여기서 권력을 장악한 권세자가 소위 “기독교적” 정치를 행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기독교적인 대안을 창출하여 항상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조직과 인물이 필요하다. 과거의 정치질서 아래서는 소수의 정치적 카운슬러가 이러한 기능을 감당하였다. 그러나 복잡하고 다원화된 세계에서는 다양한 정치적 카운슬러와 참모를 필요로 한다.

## 기독교 정치인과 제자도

### 1. 명목상의 기독교 정치인.

기독교 정치인은 직업정치인으로서 높은 제자도를 겸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sup>5)</sup> 아울러 기독교 정치인은 명목상의 기독교 정치인과 제자도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명목상의 기독교 정치인은 왕성한 정치활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는 약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여기서 기독교 정치인과 함께 기독교 세계관적인 중요성을 가진 사람은 기독교 여론형성자와 의식 있는 공중, 즉 기독시민이다. 이들은 성숙한 제자도를 통해서 기독교 정치인의 정치적 프로그램과 정치철학을 지지하고 후원할 뿐 아니라 때로는 교정해주는 역할을 한다. 정치적 행위의 효율성이 권력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주지만 정치의 영역에서 신자의 차별적 성취를 드러내는 정치선교의 가능성은 제자도로 무장한 기독교 정치인의 유무와 그를 지지하는 여론형성자와 의식 있는 공중의 지지에 의해서 종합적으로 증진된다.

#### 【 기독교인의 정치참여 형태 】

##### 높음

명목상 기독교 정치인 (Nominal Christian Politician)	기독교 정치인 (Christian Politician)
---	-----------------------------------

##### 정치적 행동

정치 활동가 (Political Activist)	기독교 여론 형성자 (Christian Opinion-leader)
--------------------------------	--

참여적 대중  
(Participant Mass)

의식 있는 공중  
(Conscientious Public)

##### 낮음

##### 제자도

##### 높음

찰스 콜슨(Charles Colson)에 의하면 제자가 된다는 것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이상이

5) 기존의 제자훈련이 가진 한계는 교회내적 제자도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 교회외적 제자도와 직업을 통한 소명은 통합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자신의 직업과 삶의 현장을 제자의 관점에서 조망하고 참여하는 것은 제자훈련의 균형을 이를 수 있다.

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제자가 되기 위한 첫 단계이고, 성경에 철저히 순종함으로 제자가 되어진다. 파스칼의 말처럼 하나님을 단지 지식으로 아는 사람과 그를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 매우 큰 차이가 있듯이, 중생을 체험한 사람과 그리스도의 분량을 향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차이는 매우 큰 것이다.<sup>6)</sup> 그렇다면 기독교 정치인을 형성시켜주는 제자도는 어떤 요소를 포함하는가?

## 2. 기독교정치인의 핵심, 정치적 제자도

견실한 그리스도인의 제자도는 기독교정치인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조건이다. 그러나 기독교 정치인이 되기 위해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정치영역의 문화를 파악한 뒤에 생기는 정치적 제자도를 가져야 한다. 정치는 정치 특유의 문화를 형성하고 있으므로 견실한 기독교 정치인은 그 정치영역의 상황과 논리, 그리고 역학구조와 갈등을 숙지하여야만 한다. 따라서 정치영역의 복합한 변화 속에서 기독교 정치인의 제자도는 콜슨의 일반적 제자도의 기반 위에서 더욱 정치상황에 맞게 적응하기 위하여 심화되고 발전된 제자도가 되어야 한다.

미국 공중정의센터의 제임스 스킬른(James Skillen)박사에 의하면 정치적 제자도는 정치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려는 노력에 의해 생긴다. 그는 기독교적인 정치를 낳는 정치적 제자도의 대전제를 다음과 같이 논의한다.

정치를 기독교적인 것으로 만들어 주는 것은 기독교인으로서의 각인이 가진 교회적 혹은 개인적 정체성이 아니다. 기독교 정치는 오직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의 정의로운 말씀에 기반을 두고 있을 뿐 아니라 그것에 의해 결정된다. 그런데 이 말씀은 정치인이 정치적 조직으로부터 여러 행동에 이르기까지 실제로 정치활동을 전개할 때 복종해야 할 말씀이다. 기독교 정치는 실제적인 정치여야 할뿐만 아니라 그것은 또한 정의로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치적 순종으로 존재하는 것이다.<sup>7)</sup>

스킬른 박사에 의하면 정치적 제자도는 말씀 중심의 제자도이며, 그 말씀은 공공의 영역에서 요청되는 정의의 말씀(The God's Word of Justice)이다. 실제로 정의로운 말씀 아래서 사회개혁의 가치를 높이 들었던 네덜란드의 유명한 수상 아브라함 카이퍼(Abraham Kuyper)는 정치적 제자도를 보여준 귀중한 모델이다. 1897년 카이퍼 박사는 스판다르트(De Standaard)지의 편집장으로 생활하던 25주년 기념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그의 말씀 중심의 정치적 제자도를 표현하고 있다.

하나의 소원이 나의 생애를 지배하는 열정이 되어왔다. 하나의 높은 정신이 나의 마음과 영혼을 가시처럼 자극하여 왔다. 나에게 부과된 그 거룩한 임무로부터 도피하기보다는 차라리 생명의 숨결을 나에게서 거두어가라 그것은 바로 이것이다. 즉 세상의 모든 반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은 사람들의 선을 위하여 다시 가정과 학교와 국가에서 재건될 것이며 성서와 자연이 증거 하는 주님의 계명을 국민의 양심 속에 되새기고 국민들은 다시 하나님께 경의를 표하게 되리라는 것이다.<sup>8)</sup>

6) Charles Colson, The Body: Being Light in Darkness(Dallas: Word Publishing, 1992), 282.

7) James Skillen, "Toward an Understanding of Politic and Government from a Christian Point of View," William A. Harper and Theodore R. Malloch eds., Where are We Now? The State of Christian Political Reflection(Washington D.C.: University Press of America, 1981), 167.

8) Kuyper, Lectures on Calvinism, 11.

그러므로 정치적 제자도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게 한다거나, 기독교인과 기독교기관을 타인들과 그들의 기관 위에 높이려는 것이 아니다. 단순히 기독교와 기독교인만을 위한 정치는 진정한 의미의 기독교적 개혁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정의를 폐지하게 된다. 기독교 정치인은 오히려 은혜로운 정의의 규범이 국가의 모든 사람과 공동체 위에 흘러넘치게 하여 모든 신자와 불신자를 돋도록 하여야 한다. 그 이유는 국가가 한 사람의 정치적 이상이나 한 계급의 욕구를 실현하는 기관이 아니라, 국민의 모든 이해관계를 조화시키고 조정하여 정의의 기반 위에서 전체 사회를 조직해나가는 법적 실체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기독교 정치인의 사명은 국가를 교회로 바꾸는 것도 아니며, 정치를 신학에서 이끌어 내는 것도 아니다. 그들의 사명은 정의로운 말씀의 법을 사회에 구현하는 것이다.

## 공중정의를 수행하는 국가

기독교 정치인이 정의를 수행하는 것이 그 필요한 사명이라면, 어떠한 정의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인가? 신캐빈주의자는 “사회적 다원주의”라는 말을 통하여 정의에 대한 실천을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들에 의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역사 속에 있는 국가를 무효화하지 않으며 그 존립근거를 부정하지 않는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국가에 대해서도 복음이다. 바울에 의하면 국가는 “하나님의 선”을 위하여 있다. 종교적 순수성의 유지와 진리수호라는 명제를 위해 국가를 부정하는 것은 공중정의(public justice) 혹은 공의를 위해 강압적 교육과 질서유지기능을 수행하는 국가의 역할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다. 무정부주의자의 정치무용론(政治無用論)은 인간의 자유를 제약하는 어떤 굴레도 없는 세계를 원하지만 이것은 인간의 윤리적 협약성과 죄에 대한 친밀성을 망각한데서 생기는 근시안적 견해이다. 정치질서는 타락을 향해 열려진 인간의 열정을 부분적으로 억제하는 정의를 위한 도구이다.<sup>9)</sup>

그런데 정의를 이루어야 할 국가가 보여주는 가장 큰 해악 중의 하나는 전제(tyranny)이다. 이는 강력한 정권이나 지도자가 각기 다른 사회영역의 분배의 구획을 짓는 담장을 파괴하는 것이며, 사회의 다원주의적 경계선을 넘어서는 것이다. 이러한 전제의 형태는 다원적 영역의 조합만큼이나 다양하다. 아울러 전제는 분배의 영역 중에서 현저하게 드러나는 정치의 영역에서만 아니라 관직의 분배와 금전의 사용으로, 또한 일과 휴식의 영역에서 인간의 분배 기준을 파괴한다. 권력과 돈의 전제라는 현상은 오늘날 어디에서나 쉽게 발견되는 명백한 영역파괴의 현상이다. 이 때문에 소유의 권리와 국가 공무원의 권리가 적절히 견제되지 않는 한, 그들은 항상 한 나라 속에서 전제군주가 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sup>10)</sup>

비록 한 국가의 정치권력이 가진 힘이 막강한 것이라 하더라도 국가 권력은 그 자체로 악한 것은 아니다. 국가의 정치권력은 이중성을 가진다. 국가의 정권은 상이한 모든 가치의 추구를 규제하므로 분배정의의 중요한 매개수단이 된다. 그것은 모든 사회적 가치가 분배되고 채택되는 영역들의 경계를 보호한다. 정치지도자들은 세습적인 지위를 제한하고, 또 한편 영웅으로부터 범죄자를 구별해 낸다. 그들은 교회와 국가 사이의 경계의 벽을 보호하며,

9) Paul Ricoeur, *History and Truth*(Evanston: Northwestern University Press, 1965), 121-2, 236.

10) Michael Walzer, *Spheres of Justice: A Defense of Pluralism and Equality*(New York: Basic Books, 1983), 정원섭 외 역, 「정의와 다원적 평등: 정의의 영역들」(서울: 철학과 현실사, 1999), 478-479.

부모의 강압적 권위를 규제한다. 그들은 군대의 징병방식을 결정하며 공무원 임용고시의 공정성을 확보한다. 아울러 그들은 이러한 일을 수행하는 자신의 권력을 헌법으로 제한하고 스스로 복종한다.<sup>11)</sup> 그러나 권력은 그 강력함으로 말미암아 그 자체가 항상 전제적인 것이 될 가능성이 있다. 권력이 유지되는 한편 동시에 억제되어야 한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권력이 전제의 왜곡된 형태를 가지는 경우는 다음의 두 가지로 집약된다.

전제의 첫째 형태는 국가의 권력과 재산, 재능, 혈통의 구분이 무너짐으로 국가 권력이 다른 가치에 의해 식민화 되는 경우이다. 식민화된 권력은 자신의 영역을 지키지 못하고 다른 가치에 의해 폭군이 된 전제적인 권리가 되어버린다. 사회의 다양한 가치는 상실되고 국가는 자율적 분배의 영역을 단속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치의 영역 속으로 들어가 다른 사회적 가치를 유린하도록 도구화된다.<sup>12)</sup> 국가가 자본가의 도구이자 경제의 부수현상이라는 비판은 권력의 영역이 자율성을 상실한 채 경제에 의해 식민화 되어버린 상태에 대한 언급이다.

전제의 둘째의 경우는 정치권력의 영역이 강력한 영역으로 등장함으로 다른 영역의 사회적 가치들을 정치화시키는 전체주의의 경우이다. 현대의 전체주의는 전제의 최고 형태이다. 이는 고도로 분화된 사회에서 생기는 체제로서 다원주의적 평등과는 대척점에 서있는 체제이다. 전체주의는 관료체제와 법정, 시장과 공장, 정당과 노동조합, 학교와 교회, 친구와 연인, 친척과 이웃시민들을 막론하고 국가의 도구로 만듦으로 새롭고도 근본적인 불평등을 일반화시킨다.<sup>13)</sup>

따라서 우리는 사회적 규제를 담당하는 권력은 유지시킴과 아울러 왜곡된 권리가 다른 가치로 교환되는 가능성을 제한하고 봉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탁월한 정치사상가의 한 사람인 마이클 월下面是小的 정치권력이 다음과 같은 한계 안에 있어야 함을 말한다. 이는 국가와 다른 영역, 즉 가정, 사법체제, 종교, 교육의 영역의 경계와 그 의미를 확정짓는 것이며, 정실주의의 극복과 각 영역의 합종연횡을 방지함으로 다양한 영역의 다원적 평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마이클 월下面是小的 국가의 권리가 머물러 있어야 할 한계를 다음과 같이 구체화시켜 설명한다.

- ① 국가의 주권은 노예화를 이루는 데까지 확장되지 않는다. 국가 관리들은 그들의 동료 시민이기도 한 그들의 국민들의 인격을 탈취할 수 없으며, 국민의 봉사를 강요할 수 없다. . . .
- ② 친권과 결혼에 관한 봉건적 권리들은 국가의 법적 능력과 도덕적 능력 밖에 자리하고 있다. . . .
- ③ 국가 관리들은 유죄와 무죄에 관해 공유하고 있는 이해를 위반할 수 없으며, 사법체계를 붕괴시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정치적 억압의 수단으로 전용할 수도 없다.
- ④ 국가 관리들은 정치권력을 매매하거나 특정한 결정을 경매에 내 맡길 수 없다. 또한 그들의 권력을 그들 가족의 이익을 증대하기 위해 사용할 수 없으며, 정부의 관직을 친척이나 동료 친구들에게 분배해 줄 수 없다.
- ⑤ 모든 국민/시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따라서 국가 관리들은 인종적, 민족적, 종교적 차이에 따라 국민들을 차별대우하는 방식으로 행위 할 수 없다. . . .
- ⑥ 사유재산은 자의적인 세금부과나 몰수로부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없어야 한다. . . .
- ⑦ 국가 관리들은 그들 국민들의 종교적 삶을 통제할 수 없으며, 그 어떤 방식으로도 신의 은총의 분배를 규제하고자 시도할 수 없다.
- ⑧ 비록 국가 관리들이 교과과정을 법제화

11) Walzer, *Spheres of Justice*, 439-440.

12) Ibid., 439-441.

13) Ibid., 478.

할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그러한 교과 과정의 실질적인 교육과정에 관여할 수 없다. ⑨ 국가 관리들은 사회적 가치의 의미와 적합한 분배 범위에 대해, 정치 영역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논의들을 규제하거나 겸멸할 수 없다.<sup>14)</sup>

## 정의의 구현에서 정치적 영성으로

정의를 구현하는 기독교 정치인은 실용적인 차원의 정치공작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영성의 차원까지 이르는 이념적 심오함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마르크스주의 지도자들이 이념교육을 그 정치참여의 출발점으로 삼아 학습하고 논쟁하는 것처럼, 정의의 구현이 가능한 차원을 넘어 심오한 세계관의 형태를 가지려면 더욱 정치지도자의 학습이 필요하다. 더구나 그러한 학습이 영적인 차원을 가지는 것이 좋다. 네덜란드의 수상(1901-1904) 아브라함 카이퍼는 이러한 면에서 좋은 실례이다. 그에게 있어서 정치행위는 영성의 표출이자, 영성의 실천이었다. 카이퍼의 해석자가 그의 사역을 “정치적 영성”으로 해석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카이퍼의 좋은 해설가인 맥켄드리 랭글리(Mckendree Langley)에 의하면 아브라함 카이퍼는 “정치적 영성”(political spirituality)을 실천하였는데, 이는 정치의 현장에서 정치인의 “사고와 행동을 의미 있게 만드는 그리스도인의 일관된 태도이다.”<sup>15)</sup> 랭글리에 의하면 정치적 전술은 시간과 상황에 따라 변화되지만 정치적 영성은 그리스도인의 항상적인 의무로 남아있다.<sup>16)</sup> 이 같은 의미에서 볼 때 카이퍼는 정치적 영성의 사람이었으며 그의 영성은 도피적 은둔자의 타계적(other-worldly) 영성은 아니었으며 더욱이 급진파나 무정부주의자의 환상적 유토피아도 아니었다. 그의 정치적 영성은 목사와 신학자로서의 이상적 훈련과 국회의원, 정당 당수, 수상으로서 정치 영역에 대한 실천적 참여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균형 지워졌다. 그의 정치적 영성은 다음과 같이 집약될 수 있다.

카이퍼의 정치적 영성의 중요성은 신학적 깊이와 독창성에 있을 뿐 아니라 그것이 실제 정치에 영향을 줌으로 정치의 판도를 바꾸는 프로그램으로 나타났다는 데 있다. 그리스도의 왕되심과 그의 왕권 하에 있는 자유로운 영역들은 더 이상 신학적 서술(theological indicative)에 머무르지 않고 윤리적 당위성(ethical imperative)이 되어 정치영역에 적용되었다. 그리스도의 왕 되심은 문화변혁과 사회갱신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과제이며, 영역주권은 이 그리스도의 왕권을 적용시키는 방법론이다.

그리스도의 왕되심은 그러므로 각 분화된 영역에서 나타나야 했다. 영역주권을 주장함으로 사회적 다원주의의 한 고전적 이론가가 된 아브라함 카이퍼에게 있어서, 인간 세상에는 다양한 분화된 영역이 존재하고 그 각각은 나름대로의 주권을 가지고 있다. 우리 인간의 삶은 보이는 물질계의 앞마당과 보이지 않는 영계의 뒷마당을 가지는 데, 이는 단순하지도 획일적이지도 않으며, 무한히 복잡한 유기적 총체로서 구성되어진다. 개인은 오직 다양한 집단 안에서 형성되어지며 이 다양한 집단은 인간의 총체성을 드러낸다. 이러한 총체를 이루는 각각의 톱니바퀴들은 자신의 고유한 축을 가지고 있으며, 각각은 자신의 정신, 혹은 지도적 지침을 가지고 있다. 아울러 이러한 각 영역들은 넘을 수 없는 자신의 한계와 담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세계를 우리는 도덕적 세계, 과학의 세계, 비즈니스의 세계, 예술의 세

14) Ibid., 442-443.

15) Mckendree Langley, *The Practice of Political Spirituality*(Ontario: Paideia, 1984), 3.

16) Ibid., 165.

계라고 말하는데, 이는 영역이라는 말을 사용하여, 도덕의 영역, 과학의 영역, 비즈니스의 영역, 예술의 영역, 교회의 영역, 가정의 영역이라고 명명된다. 이러한 영역은 자신의 범주와 자신의 주권을 가지는 것을 그 특성으로 한다. 아울러 이러한 영역은 각기 다른 법칙에 의하여 존재하며 자신의 규칙과 각 영역의 전문가나 수장에게 복종한다. 사상의 영역에는 논리의 법칙이 주도하며, 양심의 영역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장을 한다. 아울러 믿음의 영역에서는 그의 삶의 변화를 통하여 믿음으로 자신을 변화시킨 자가 강력한 주도권을 가진다.<sup>17)</sup>

카이퍼의 영성은 참여적이며 개혁적인 영성이었다. 그는 실제 기독교인들의 행동이 정치 영역에 뛰어들어 잘못된 세속주의와 자유주의, 마르크스주의자들과 싸워 참다운 기독교 정치이념을 현실사회에 구현시켜야 하는 것으로 보았고, 다른 인생의 영역과 마찬가지로 정치에 있어서도 그리스도의 군병이 되는 것을 소명으로 여겼다.<sup>18)</sup> 특히 카이퍼는 공공정책을 입안하는 정당과 여론을 형성하는 언론매체에 기독교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원하였다. 그 이유는 사회의 세속화에 대항하여, 교회 안의 영적 갱신운동은 교회 밖의 정치적 개혁과 조화됨으로 교회의 고립화 및 국가 전체의 암담한 비기독교화를 극복해 낼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sup>19)</sup> 이러한 카이퍼의 생각은 실제로 1879년 반혁명당 창당대회에서 통과된 21개의 정강 속에 구체화되었는데, 그 첫 5개항은 다음과 같다.

1. 반혁명 운동, 즉 기독교적 역사변혁운동은 네덜란드의 역사적 실재를 반영한다. 종교개혁의 전통은 오늘날에 부합되는 방법으로 적용되었다.
2. 주권적 권위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서만 발견되며, 국민의 의사나 인본주의적 법률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 인민주권론(popular sovereignty)은 받아들여 질 수 없는 반면, 오렌지가문의 주권은 하나님의 역사적 인도 아래서 확인되는데, 이는 1813년 네덜란드 독립의 재확인과 국가헌법의 입안에 의해 정점에 이르렀다.
3. 정치의 영역에 있어서도 반혁명운동은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한 강령으로 고백한다. 국가의 권위도 오직 공복(public officials)의 양심 속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법 아래 있으며, 이것은 어떤 교회의 성명을 통해 직접 선포되는 법 아래 있는 것은 아니다.
4. 기독교 국가에서 하나님의 종인 정부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되, (1) 국가생활 속에서 복음의 충만한 표현을 막는 모든 행정적 사법적 장애를 제거함으로 하여야 한다. (2) 정부는 정부의 권한밖에 있다고 하며 국가의 영적 발전을 직접 방해하는 모든 것을 억제함으로 하여야 한다. (3) 정부는 영원한 것들에 대한 그들의 견해차와 상관없이, 모든 교회와 종교 조직과 시민을 평등하게 대함으로 하여야 한다. 그리고 (4) 정부는 양심 속에 국가권력의 한계를 인정함으로 하여야 한다.
5. 반혁명운동은 정부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다스려지고 있음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정부의 통치권이 주어짐을 고백한다. 국가는 그러므로 (법정에서) 선서를 요청할 권리와 주일을 공휴일로 지킬 권리가 있다. 현행의 주일 입법

17) Abraham Kuyper, "Sphere Sovereignty," James D. Bratt ed. Abraham Kuyper: A Centennial Reader(Grand Rapids: Eerdmans, 1998), 467.

18) Langley, The Practice of Political Spirituality, 172.

19) Abraham Kuyper, The Practice of Godliness (Grand Rapids: Eerdmans, 1948), 유화자 역, 『경건의 연습』(서울 : 생명의 말씀사, 1981), 47-50.

을 정정하여 이날에 모든 정부의 기능을 쉬게 하려는 것도 국가의 관심사이다.<sup>20)</sup>

이러한 반혁명당의 정강의 특징은 기독교적 제자도의 정치적 적용이며, 이는 다음과 같이 분석될 수 있다. 첫째, 반혁명당의 강령은 신앙의 전통을 정치개혁을 위한 정신으로 사용하였다. 둘째, 신앙의 확인은 정치에 있어서 혁신(radical)과 반동(reactionary)의 양극단을 제거하려는 것이다. 셋째, 하나님 주권의 확인은 인민주권과 국가주권론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다. 넷째, 하나님 주권의 확인은 법치에 의해서 대변된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입법자(Law-giver)로서 법을 통하여 이 세상을 통치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법(lex)은 정치인인 왕(rex)에 앞선다. 다섯째, 하나님의 국가에 대한 통치는 공복의 양심을 통해 역사하는 법에 의해야 하며, 신정(神政, theocracy)의 교권적 강제는 시대착오적이다. 여섯째, 정부의 교회를 위한 역할은 교회와 기타 종교조직을 위해 평등원칙을 견지하는 것이며 건전한 종교의 자발적 융성을 방해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일곱째, 정부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존립할 수 있음을 인정하여야 한다.

### **선언적 결론: 나라가 주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계와 역사의 주인이시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과 과학의 주님이시기도 하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세속사회에서 살며, 그 이름의 거룩함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시대에 살고 있다.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정치 영역의 불의는 역사 속에서 오랜 동안 악의 출처가 되었음을 부인 할 수 없다.

모든 세상의 나라는 주의 것이다. 하나님은 왕의 왕이시며, 모든 군주와 방백의 주님이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의 정치인과 지도자들은 오랜 동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정의로운 율례와 법도를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공평과 정의는 무시되고 이기적인 지역주의, 학연과 혈연 등의 전근대적 연고주의가 정치계를 왜곡시켰다. 정치인의 부정부패와 정경유착의 악순환, 그리고 정치철학과 정강정책과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본능적인 정치인들의 이합집산은 아직도 정치를 가로지르는 오랜 관행이다. 그 결과 존경을 받아야 할 정치인이 냉소와 무관심의 대상이 되었고, 정치의 영역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생산성이 낙후된 부분으로 전락되었다. 심지어 오늘날 한국의 위기는 정치인의 위기와 깊은 상관관계가 있음에 이르게 되었다.

21세기에 들어선 지금 이 시대에 한국 정치는 과연 그 미래가 있는가? 위기의 시대란 절망의 시대는 아니다. 그러나 위기는 구태의연함을 반복하면서도 파국을 피할 만 한 시대는 더욱 아니다. 정치분야의 위기는 무엇보다도 새 지도력 혹은 새로워진 정치지도자를 필요로 한다. 진정한 정치지도자는 자신의 지도력과 권위의 출처가 하나님과 정치공동체의 위임임을 믿는 사람들이다. 이것을 믿는다면, 지도자는 하나님의 종일 뿐 아니라 이웃의 종인 것이다. 이에 하나님과 민족을 섬기는 종된 정치인의 출현을 간절히 고대한다. 교회의 후예들이 정치인으로 자라나, 나라의 으뜸이 되는 머슴들이 되기를 열망한다.

아울러 우리는 훌륭한 기독교적 정치인이 출생하는 것이 아니라 길러진다는 사실을 확신 한다. 이에 직업정치인으로서 높은 제자도를 겸비한 사람이 자라나는 풍토와 환경을 마련할

---

20) Langley, The Practice of Political Spirituality, 26-8.

뿐 아니라, 자원을 제공하는 조력자가 필요함을 인정한다. 기독교 세계관 위에 정치적 프로그램과 정치철학을 세운 자, 정치적 제자도 위에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정치영역을 개혁하고 쇄신시키려는 정치적 영성을 가진 자를 위한 터전이 마련되어야 한다.

명실상부한 기독교 정치인은 21세기의 소망이다. 그러나 이들은 교회의 영적 지도와 기도의 자양이 없이는 주어지지 아니하는 사람들이다. 교회의 기도 속에 탄생하는 기독교 정치인의 사명은 다만 정의로운 말씀의 법을 공평하게 사회에 구현하려는 것이다.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여 새로운 정치세계를 인도할 지도자를 양성하는 일은 한국 교회의 성숙된 사역의 일환이며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이루는 사역의 중대한 부분이 될 것이다. 지난 세기의 초반, 이 나라의 여명기에 교회의 아들과 딸이 민족의 지도력을 형성하는 구심점의 역할을 하였듯이, 이제 한국 교회가 새로운 정치지도력을 일으키는 일의 선두에 서게 하는 것이 절실하다.

---